2023년 4월 시청자평가원 활동실적

방송사명(법인명) :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

1. 회의 개최

o 일시 및 참석인원

일 시	참 석 인 원		
	시청자평가원	시청자위원회	방송사측
-	-	-	-

2. 시청자평가프로그램 운영 실적

프로그램명	편성시간	편성시간 변경
바로보는TV 옴부즈맨	본방송 매주 일요일 03:50~04:20 (재방송 매주 월 00:30~01:00)	해당사항 없음

o 방송현황

※ 프로그램 제목과 평가원 진술 주제를 3줄 이내로 기술

평가원명	방송일	방송 주요 내용	비 고
임윤주	4/2	[뉴스프라임]법원, '베트남전 학살' 한국정부 배상책임 첫 인정 [뉴스리뷰]윤대통령 "한일관계, 과거 넘어서야…일본 수십차례 사과"	
김홍태	4/9	[뉴스15]경찰 "강남 납치·살인, 피해자 재산 노린 계획범죄" [뉴스오늘]강남 납치·살인 일당, 범행 동기는…오늘 영장심사	
이동준	4/16	[뉴스리뷰]'병역비리 의혹' 라비 "어리석은 선택 사과…빅스 탈퇴할 것" [뉴스메이커] BTS 슈가, 미 프로농구 NBA 앰버서더 위촉	
임윤주	4/23	[뉴스 투나잇]'대입 반영' 학폭대책 실효성은?…부작용 우려도 [뉴스프라임]"대학졸업 때까지 불이익"…학폭, 대입에 전면반영	
안지연	4/30	[뉴스 15]마약 든 가방 찾으러 지구대 방문한 60대 입건 [뉴스 17]중학생 집단 필로폰·고교생 마약상…저연령화 심각	

3. 시청자평가원 변동사항

구 분	성 명	전 · 현직	평가원 선임일	비 고 (변경사유 등)
활동	김홍태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 변호사	2018. 06. 28	-
활동	임윤주	이화여대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연구소 연구원	2021. 11. 28	-
활동	이동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	2023. 01. 31	-
활동	안지연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총무이사	2023 .01. 31	

붙임 : 1. 평가원 진술 및 답변내용 1부.

2. 시청자평가원 방송원고 1부.

[붙임1]

<평가원 진술 및 방송사측 답변 내용>

방송일시	평가원명	평가원 진술내용	답변내용
2023 4/2(일)	임윤주	최근 유명 연예인의 마약 복용 소식으로 떠들썩한데요. 이제는 일반 대중들도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게 되면서,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월 20일 <뉴스워치>에서 단독 보도한, 마약류 의약품 불법거래 판매자 입건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의료용 마약류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명 '나비약'이라 불리는 식욕억제제, 디에타민 거래는 실시간으로 이뤄집니다. 최근 나비약을 되팔이하려던 판매자들이 경찰에 적발되었는데요. 검거된 판매자들 중에는 10대 청소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병원에서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쉽게 처방해준다는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이들은 처방받은 마약류 약품 물량을 SNS를 통해 판매 글을 올리고, 나이가 어려 약을 처방받지 못하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마약류를 확보하려는 구매자들을 노렸습니다. 본 보도는 연합뉴스TV 단독 보도인데요, 물론, 이후 많은 언론사가 빠르게 동일한 내용을 취재하여 보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보도가 의미 있는 이유는 연합뉴스TV가 마약류 불법 거래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취재하고 보도해왔다는 데 있습니다. 해당 보도에서도 언급되었듯, 이미 지난 2일 뉴스에서 온라인 불법거래 실태에 대해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후 단순히 사건 보도에 그치지 않고, 해당 사건이 처방이 쉽다는 빈틈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취재도 진행되었습니다. 24일 <뉴스 리뷰>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를 취급하면, 보고를 통해 관리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남용 처방이 의심되는 의사에게 경고하고, 이후에도 반복해 처방한 의사는 처방과 투약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다만 사후 조치로 마약류가 조제되는 시점과 시간 차가 발생합니다.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마약 문제를 지난해부터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이 마약 문제에 쉽게 빠져들고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짚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약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보도를 통해 사회 이슈화 할 예정입니다.

		다. 처방·조제 단계에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건평원의 시스템과 식약처의 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안이 언급되기도 하였으나, 현재까지는 눈에 보이게 드러난 결과물은 없는 상황입니다. 마약류 의약품을 관리할 수 있는 기관과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법안 마련과 관련된 진행 상황까지 체크하는 등 꾸준한 취재가 엿보인 보도였습니다. 관련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더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기대하겠습니다.	
2023 4/9(일)	김홍태	지난 3일 뉴스프라임에서는 지난달 29일 밤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한 뒤 살해하고, 대전 대청호 부근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는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서울중앙지법이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3명에 모두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사건 예비단계에 가담했다 이탈한 추가 공범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비록 가해자들은 체포가 되고 현재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이지만,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납치가 발생하고 살해로 이어져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어디서든 납치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에 충분한 사건인데요, 현재 범죄 전문가 중에는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번 범행의 배경에 조직적인 범죄가 있을 수도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을 접하면서 먼저 이러한 범행을 사전에 막을 수는 없었는지 그리고 발생했다면 초동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가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서울수서 경찰서와 수사 컨트롤타워 국가수사본부까지 초동 대처에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공조 수사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추후보도를 이어가면서 이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짚을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특히 가해자들이 서울 강남에서 외곽으로 벗어났다면 경기 남부 쪽으로 빠질 수 있으며, 빠르	강남역 납치 강도살해 사건은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충격이 있었습니다. 관련 기사를 보도하면서 경찰이 초기에 공조수사를 강화했더라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지 않았나하는 내용의 리포트를 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사건보도에 있어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등은 정확하게 짚어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게 경기남부경찰청에 공조 요청을 했다면 살해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30일 사건 발생 후 4시간 30분쯤 지난 상황에서 경기남부경찰청에 긴급출동 대응 요청을 하였으나, 이미 경기남부청 권역을 벗어나 대전에 다다른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가해자들이 대전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유기했기 때문에 공조대응 요청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또한 수서경찰서장과 서울경찰청장 등 지휘부 보고가 사건 발생 한참 뒤에야 이뤄진 정황도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도 좀 더 짚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023 4/16(일)	이동준	최근 인종, 성별 등의 다양성을 반영하려는 전략으로 원작을 재해석하는 작품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도 존재하며, 어떤 작품은 원작의 취지나 메시지를 헤친다고 비난받기도 합니다. 지난 7일 출발600은 신작 영화들을 소개하며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원작 비틀기란, 기존에 존재하는 작품을 새로운 형태로 재해석하거나 변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에 존재하던 작품에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거나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기존에 있던 작품을 원작으로 삼아 새로운 버전을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원작 비틀기는 기존에 있던 작품의 새로운 재해석을 제공하며, 새로운 팬층을 만들어내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다양성 전략으로서 기존 작품에서 찾을 수 없는 재미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디즈니 캐릭터인 곰돌이 푸를 공포 영화로 변형한 작품은, 해당 동화의 저작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제작이 가능했습니다. 저작권 만료로 다양한 장르적 변화가 가능해졌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인종적 다양성 차원에서 흑인을 캐스팅한 헐리우드의 시도에 대해 정치적 올바름의 문제가 제기 되는 것은 어쩌면 미국 내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류가 글로벌 시대에 해외에 한국 문화의 다양성이란 측면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미국 중심의 다양성 담론은 주로 인종주의를 개선하고 있지만 다문화 중심 문화다양성 정의가 한류정책 및 문화예술정책에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대중문화가 가지는 획일화나 표준화 논쟁, 한류의 민족주의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문화다양성과 사회적	지적해주신 부분에 공감합니다. K-컬처가 세계적을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류 역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곳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보도되고 변주되고 있습니다. 다양성을 제시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짚어보는 것은 매우 유의미하다고 봅니다. 최근 흑인을 인어공주로 기용한 사례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셨는데 조만간 영화가 개봉돼, 기자 시사가 가능해지는 대로 지적해주신 다양성에 대한 다방면의 의미를 짚어보는 내용도 기사에 포함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가치 추구를 위한 방법은 무엇일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관객의 불편함에 대한 우려보다 이러한 다양성 추구가 의미하는 정치, 경제, 사회의 의미를 되짚어 보며 논의를 확대해보았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3 4/23(일)	임윤주	최근 10대 학생들의 안타까운 사건이 연이어 있었는데요. 먼저 17일 <뉴스 투나잇> 보도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빌딩에서 10대 학생이 떨어져 숨졌습니다. A양은 며칠 전부터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해당 과정을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생중계했습니다. 당시 A양의 라이브 방송을 20여 명이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방송을 보다 사태의 심각함을 느낀 시청자들이 신고를 했고, 투신 약 10분 전 경찰과 소방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A양의 극단적 선택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자살 사건을 보도할 경우, 다른 보도보다 더 신중을 기해야 할 텐데요. 10대의 자살 사건은 시청자들에게 더 많은 안타까움과 충격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특히 또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 보도의 경우 'SNS 생중계'라는 자극적인 요소가 헤드라인에서 강조되었고, 보도 내용에서도 '라이브', '실시간', '시청자' 등 관련 내용이 지속 언급되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한, 본 사건과 실제로 관련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은 '또 다른 투신 소동'이 함께 언급되고, '자살 명소'와 같은 단어가 보도된 점 역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살 보도 권고 기준에서도 이와 같은 자극적인 표현을 삼갈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10대 중학생 투신 관련 SNS 생중계 관련해 선정적인 제목이나 자극적인 제목을 사용하지 말 것을 관련 부서에 재차 공지했습니다. 앞으로 기사제목을 비롯해 본문 등에서 범죄관련해서는 보다 정제된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 4/30(일)	안지연	최근 마약과 관련된 범죄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된 것이 마약 범죄 급증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는 지난 23일〈뉴스 15〉에서 마약 범죄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마약을 넣어둔 가방을 찾으러 경찰서 지구대를 찾은 60대 A씨가 불구속 입건되었다는 내용인데요,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월, A씨가 분실한 가방 내부에서 담배 모양의 마약 의심 물체를 발견하였고	마약범죄 등 범죄보도 특성상 모방범죄 우려가 상존하는 게 사실입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번지는 청소년 대상 마약 문제를 지적하고 사회적 환기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보기에 따라 모방범죄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범죄보도에 있어 구체적인 범행 수법이나 묘사를 자제해가겠

		이를 검사한 결과 마약임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분실 가방을 찾기 위해 방문한 A씨는 경찰의 추궁 끝에 혐의를 인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2일 〈뉴스 17〉에서 청소년들의 마약 범죄에 대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마약과 관련된 보도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 마약 범죄가 만연해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된 보도는 주로 마약을 어떻게 구하고 팔았는지를 다루는 경향을 보입니다. 사실에 근거한 보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약을 사고 파는 내용이 뉴스를 통해 빈번하게 등장하다 보면 모방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 범죄 관련 보도를 할 때에는 마약 사범이 받게 될 처벌 등을 함께 언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뉴스 17〉에서 다룬 청소년 마약 범죄 보도 말미에 교육정책의 부재 및 SNS 광고의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덧붙인 것처럼 마약 범죄 증가와 관련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마약이 우리 사회에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해보자는 취지의 내용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습니다.

[붙임2]

<시청자평가원 방송원고>

● 임윤주 시청자평가원(23. 04. 02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592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현 정부의 외교 전략 및 방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주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국가가 있는데요. 바로 베트남입니다. 현재 1960년대 베트남 전쟁 당시, 우리 군의 현지 민간인 학살 관련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합뉴스TV의 관련 보도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2월 7일 <뉴스 프라임>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1968년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 총격으로 가족이 숨지고 자신도 다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한 베트남 국민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2020년 4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베트남전 당시 해병 제2여단 군인들이 마을 민간인 70여 명을 학살했다고 이미 알려진 사건입니다. 그로부터 약 55년이 지난 뒤, 우리나라 법원의 판단이 나온 건데요. 서울중앙지법은 정부가 3,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베트남 민간인 학살에 대한 정부의 배상 책임을 법원이 인정한 것은 처음입니다. 소송에서 진행된 주요 쟁점은 사실관계가 맞는지, 맞다면 정당행위인지, 소멸시효가 지난 건 아닌지였습니다.
재판부는 목격자 증언과 증거에 따라, 가족이 군인들의 총격으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시효 기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그간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2월 재판부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 보도 이후, 후속 보도가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후 3월 9일 우리 정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곧바로 공식 논평을 통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동안 한국과 베트남 정부는 해당 이슈에 대해 암묵적으로 상호 묵인하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나 베트남 국민이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이 진행되었을 뿐 아니라, 판결이 났고, 이에 우리 정부가 항소까지 제기하게 되면서, 양국 간의 공식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정부의 항소로 또 한 번 재판이 진행될 텐데요. 비단 재판의 향방뿐 아니라 양국의 외교 관계가 걸린 만큼, 해당 이슈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주요하게 보도해주었으면 합니다.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생중계를 통해, 한일관계에 대한 입장을 상세하게 설명했는데요. 연합뉴스TV는 해당 국무회의와 관련하여 다양한 보도를 통해 전습니다. 그 가운데 3월 21일 <뉴스 리뷰>와 22일 <뉴스 포커스> 살펴보겠습니다.
3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현재와 과거를 경쟁시킨다면 반드시 미래를 놓치게 될 것'이라는 영국 수상 처칠의 말로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한일관계 정상화 방안을 고민해왔지만,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고 회고하며, "한일관계도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또한 "한일관계는 한 쪽이 더 얻으면 다른 쪽이 잃는 제로섬 게임이 아닌 '윈윈 관계'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정부가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한다"면서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한편, 야당과 지난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윤 대통령은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며 야당을 우회 비판했고, "한일 정부의 대화가 단절된 채 파국 직전에서 그대로 방치됐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일외교 정책도 비판했습니다.
22일 <뉴스 포커스>에서는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김성완 시사평론가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특히 주요하게 논의한 부분은, 윤 대통령이 "이미 수십 차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반성과 사과를 했다"라는 발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최수영 평론가는, 일본이 일왕과 총리 등 각급 단위에서 과거사 문제에 사과를 해온 것이 50여 차례 이상으로, 여러 차례 사과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였습니다.

다만, 그 여러 차례 걸쳐 행해진 사과가, 일관되고 지속된 목소리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지적에 대해 최 평론가는 '일관되고 지속된 목소리는 아니었다'고 답하며, 이것이 한일 관계가 우호적이었다가도 경색되기를 반복한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하게 전달하고자 했던 것은, 악화된 한일관계를 풀기 위한 현 정부의 선제적 태도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야권과 전임 정부에 대한 비판도 엿보였는데요. 이에 대해 김성완 평론가는 그것이 현재 부정적인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20여 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들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역대 최장 시간 국무회의 모두발언이었습니다. 그만큼 대통령이 직접 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느껴졌는데요. 다만 일부 발언들은 현재 국민이 느끼는 의구심이 해소되기보다는 자칫 가중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뉴스 포커스>의 대담은 전문가들의 해석을 들으며 발언의 배경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대담이었습니다. 시간의 제약으로, 일부 발언에 대해서만 분석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발언의 80% 이상을 한일관계와 관련해 할애한 만큼, 더 많은 부분에 대해 논의했다면 보다 더 흥미로운 대담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윤 대통령이 가장 먼저 언급했던 처칠 전 영국 수상의 말이나, 박정희 전 대통령의 발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연설 등을 인용한 배경이나 의미도 살펴본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설명했듯, 이번 국무회의 생중계는 한일정상회담 이후 이어지고 있는 후폭풍을 잠재우기 위한 정면돌파인데요. 이후 실제로 대국민 설득이 성공했는지, 국민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에 대해서도 살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의 마약 복용 소식으로 떠들썩한데요. 이제는 일반 대중들도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게 되면서,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월 20일 <뉴스워치>에서 단독 보도한, 마약류 의약품 불법거래 판매자 입건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의료용 마약류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명 '나비약'이라 불리는 식욕억제제, 디에타민 거래는 실시간으로 이뤄집니다.
최근 나비약을 되팔이하려던 판매자들이 경찰에 적발되었는데요. 검거된 판매자들 중에는 10대 청소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병원에서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쉽게 처방해준다는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이들은 처방받은 마약류 약품 물량을 SNS를 통해 판매 글을 올리고, 나이가 어려 약을 처방받지 못하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마약류를 확보하려는 구매자들을 노렸습니다.
본 보도는 연합뉴스TV 단독 보도인데요, 물론, 이후 많은 언론사가 빠르게 동일한 내용을 취재하여 보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보도가 의미 있는 이유는 연합뉴스TV가 마약류 불법거래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취재하고 보도해왔다는 데 있습니다.
해당 보도에서도 언급되었듯, 이미 지난 2일 뉴스에서 온라인 불법거래 실태에 대해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후 단순히 사건 보도에 그치지 않고, 해당 사건이 처방이 쉽다는 빈틈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취재도 진행되었습니다. 24일 <뉴스리뷰>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를 취급하면, 보고를 통해 관리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

남용 처방이 의심되는 의사에게 경고하고, 이후에도 반복해 처방한 의사는 처방과 투약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다만 사후 조치로 마약류가 조제되는 시점과 시간 차가 발생합니다.
처방·조제 단계에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건평원의 시스템과 식약처의 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안이 언급되기도 하였으나, 현재까지는 눈에 보이게 드러난 결과물은 없는 상황입니다.
마약류 의약품을 관리할 수 있는 기관과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법안 마련과 관련된 진행 상황까지 체크하는 등 꾸준한 취재가 엿보인 보도였습니다. 관련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더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기대하겠습니다.

● 김홍태 시청자평가원(23. 04. 09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593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지난 주 연합뉴스TV는, 지난 1일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에 규정된 전기차 보조금 세부규정을 공개했다면서,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담겼는데, 한국의 요구 사항이 대체로 반영됐다는 내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지침에 정부와 배터리 기업들은 일단 안도하고 있지만 중국산 핵심광물 의존도 낮추기, 그리고 일본, 유럽연합 등 전기차 주요 생산국가와의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한다고도 전했습니다.
지난 주 첫 소식은 지난 1일 방송된 15시 뉴스인데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발생한 여성 납치 살인 사건은 피해자의 재산을 노린 범행이라고 전하며, 긴급체포된 이들은 지난 3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좀 더 체계적인 조치를 취했다면 살인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일 브리핑에서 "피의자 중 한 명이 금전 목적으로 범행을 공모했다는 취지로 진술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피의자 2명이 범행을 공모했고, 한 명은 도구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2~3개월 전부터 피해자를 미행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한 것으로 보고 경위를 파악 중이며, 이들은 지난달 29일 밤 11시50분쯤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여성을 차에 태워 납치한 뒤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31일 긴급체포됐다
고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1일 뉴스오늘에서는 당시까지 금전을 노렸다는 것 정도만 알려졌을 뿐, 구체적인 살해동기는 파악 중이었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납치와 살인은 피해 여성의 가상 화폐를 노리고 범행이 이뤄졌지만, 구체적으로 피해자 소유의 가상 화폐가 어느 정도인지 당시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범행을 처음 제안한 이모씨는 피해자와 이미 금전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번 사건의 핵심인 이 씨는 당시 피해 여성과의 구체적인 관계에 대해 입을 열지 않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가상화폐만을 탈취하기 위해 벌인 범행인지는 수사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며, 이 씨가 피해 여성과 어떤 관계였는지에 따라 범행 동기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라 전했습니다.
여성과 일면식도 없던 피의자 가운데 한 명은 3,600만원의 빚을 탕감하기 위해 납치와 살인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는데요, 이외 다른 목적에 대하여도 살펴봐야 하며, 경찰은 이들 외에도 피해 여성과 관련이 있는 주변인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지난 3일 뉴스프라임에서는 지난달 29일 밤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한 뒤 살해하고, 대전 대청호 부근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는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서울중앙지법이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3명에 모두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사건 예비단계에 가담했다 이탈한 추가 공범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비록 가해자들은 체포가 되고 현재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이지만,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납치가 발생하고 살해로 이어져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어디서든 납치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에 충분한 사건인데요, 현재 범죄 전문가 중에는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번 범행의 배경에 조직적인 범죄가 있을 수도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을 접하면서 먼저 이러한 범행을 사전에 막을 수는 없었는지 그리고 발생했다면 초동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가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서울수서 경찰서와 수사 컨트롤타워 국가수사본부까지 초동 대처에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공조 수사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추후보도를 이어가면서 이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짚을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특히 가해자들이 서울 강남에서 외곽으로 벗어났다면 경기 남부 쪽으로 빠질 수 있으며, 빠르게 경기남부경찰청에 공조 요청을 했다면 살해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30일 사건 발생 후 4시간 30분쯤 지난 상황에서 경기남부경찰청에 긴급출동 대응 요청을 하였으나, 이미 경기남부청 권역을 벗어나 대전에 다다른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가해자들이 대전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유기했기 때문에 공조대응 요청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또한 수서경찰서장과 서울경찰청장 등 지휘부 보고가 사건 발생 한참 뒤에야 이뤄진 정황도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도 좀 더 짚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난 1일 토요와이드에서는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에 규정된 전기차 보조금 세부규정을 공개했다면서, 한국의 요구 사항이 대체로 반영됐다는 내용이라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 나가있는 특파원은 미국 재무부가 공개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배터리 관련 세부 지침에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배터리 조립과 핵심광물 채굴, 가공 과정에서 지켜져야 하는 구체적인 지역 기준이 담겼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배터리 관련하여 한국 업체들은 구성재료는 국내에서, 이후 양극판·음극판을 만드는 단계는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핵심인 음극재와 양극재를 만들 때 필요한 구성 재료를 배터리 부품으로 포함할지가 관건이었는데, 포함되지 않아 한국의 요구가 반영됐다고 합니다. 이대로라면 현재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핵심 광물에서도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한 재료도 사용이 가능하게 해달라는 한국 측의 요구가 일부 반영됐다고 하는데요, 미국은 이 같은 규정을 이달 18일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미뤄왔던 세부지침까지 확정되면서 미국의 IRA 법안은 완전한 시행 국면에 접어들게 됐는데요, 북미 최종 조립이라는 법 조항은 바뀌지 않았지만, 리스용 전기차에 대해선 예외를 받았고 배터리와 핵심광물에서도 한국 기업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돼 당장의 피해는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게 됐단 평가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려는 남아 있는데요, 미 재무부가 전기차 배터리 부품과 핵심광물 조달을 금지하는 '외국 우려 단체'를 추가로 발표할 예정으로, 사실상 중국 기업 다수가 포함될 것으로 보여 중국에 대한 광물 의존도가 큰 한국 기업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1일 뉴스15에서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IRA 세부규칙에 한국 입장이 대체로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정부와 업계는 일단 한숨 돌리는 분위기라면서, 정부는 "배터리·소재 업계는 이번 발표로 불확실성이 상당히 해소됐다"고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양,음극재를 국내에서 만들어 미국에서 배터리셀을 조립하는 현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보조금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 건데요,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분명하다며, 우선, 2025년 전까지 중국산 핵심광물의 높은 의존도를 줄여야 하는 부담이 크다고 합니다. IRA는 보조금 등의 혜택을 받으려면 전기차 배터리용 핵심광물을 2025년부터 '외국 우려 단체'에서 조달해선 안된다고 못 박았는데요, 미 재무부가 아직 '외국 우려 단체'를 공개하진 않았지만, '중국 배제'란 입법 취지상 중국이 핵심이 될 것이라면서, 그런데 한국은 지난해 전기차 배터리 필수재료 수산화리튬 중국 의존도가 무려 84%에 달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가 없는 일본이 핵심광물 원산지 인정국에 들고 유럽연합도 비슷한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전망되는 점 역시 달갑지 않은 내용이라는데요, 한미 FTA를 체결한 우리로선 이점은 없고 경쟁자만 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급한 불은 껐지만,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문제부터 풀어야 할 과제는 여전하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1일 뉴스오늘에서는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인플레이션감축법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관련 세부지침 규정안에 따르면 핵심 광물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한 재료라도, 40% 이상을 한국 등 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가공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부품의 경우, 가치의 50% 이상이 북미에서 제조·조립돼야 보조금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양극판과 음극판이 부품으로 분류됐지만 한국이 제조하는 양극 활물질 등 그 구성재료는 부품에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한국 업체들은 대부분 양극 활물질을 국내에서, 양극판과 음극판은 미국에서 만들고 있어,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보조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는 평가라며 이같은 규정은 4월 18일부터 적용된다고 마무리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이란 작년 8월16일 발효됐는데요, 의약품과 에너지 가격 인상 억제를 통한 물가 안정화는 물론, 의료비와 에너지 비용 감소 및 세액 공제 등 직접적인 가계 지출 축소를 도모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 상황에서의 미국 국민 생활 안정이라는 명분을 추구하고 있는 법이라고 합니다. 위 보도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라도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보였습니다.
인플레이션감축법의 세부지침 규정안의 핵심은 미국은 내년부터 우려대상기관에서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장착한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것이며, 우려대상기관에서 추출·가공·재활용한 배터리 핵심 광물을 포함한 전기차 역시 2025년부터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는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가 어느정도 받아들여진 것도 중요하집만, 결국 배터리 공급망을 전면 재편하는 데 2년도 남지 않은 상황이기에, 과연 이러한 전면 재편이 2년 안에 가능한지 여부도 짚을 필요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세부지침 규정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얻는 것은 무엇이고, 잃어버리는 것은 무엇인지가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는데, 그러한 것이 없어서 아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보건, 청정에너지, 조세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진다면 각각의 부분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유불리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도 좀 더 추가적인 보도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현재 25년만에 13개월 연속 무역적자인 상황이고, 앞으로도 우리의 경제가 더욱 어려워진다고 예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우리의 요구가 일부분 받아들여진 것에 만족하지 말고 무역수지 측면에서 어떠한 방향을 취해야 우리에게 더욱 유리한 것인지를 좀 더 크게 바라보고 판단할 필요는 있어 보였습니다.

● 이동준 시청자평가원(23. 04. 16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594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아이돌 그룹의 경우 그룹 활동의 성격상 한 명이라도 군대에 가게 되면 전체적인 그룹 활동이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최근 불거진 병역비리 사건이 연예계에도 많은 파장을 가져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1일 뉴스리뷰에서는 래퍼 라비의 소속팀 빅스의 탈퇴 소식을 전했습니다.
래퍼 라비가 병역 비리 의혹에 대해 사과하며 소속 그룹 빅스에서 탈퇴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라비는 소속사를 통해 "저로 인해 상처 입으셨을 뇌전증 환자와 가족들, 그리고 병역 의무자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한 마음에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며 "멤버들에게 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탈퇴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앵커는 라비가 소속사 대표 김씨, 브로커와 짜고 뇌전증 환자로 행세해 허위 진단서를 받고, 병역 면제를 시도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기소 됐다고 전했습니다.
래퍼 라비는 가짜 뇌전증 진단서를 받아 병역 면제를 시도한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라비는 빅스에서 공식적으로 탈퇴를 발표하며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특히 연예계에서 병역문제가 더 민감하게 다뤄지는 이유는 아이돌이 병역 이행을 위해 활동을 중단하거나, 일정 기간 또는 긴 시간 동안 사라질 수 있어서 그룹 또는 기업의 이익과 팬들의 기대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병역 이행 전후의 인기 차이가 큰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룹의 활동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역 이행 여부는 개인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이를 고민하는 모든 이들이 책임감 있게 대처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라비의 행동 뿐 아니라 그가 소속된 빅스의 소속사인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의 대처도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소속사는 라비의 행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비판이 컸습니다. 연예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의 계약 관리와 아티스트의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해 더욱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말 프로배구 조재성 선수가 고백한 허위 뇌전증 병역 비리 사건으로 인해, 연예계와 스포츠 계 등을 포함한 108명의 병역 면탈자가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병역 비리는 사회적, 국가적 문제를 초래하며, 병역 의무 이행의 중요성과 국민적 의무감을 상실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브

로커가 어떤 방식으로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는지 그러한 범행이 가능한 병역체계의 문제는 얼마나 심각했는지 또한 이에 대한 병무청의 대응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후속보도를 다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한편, 연합뉴스 TV는 잠정 활동 중단 속 입영과 솔로활동들에 전념하고 있는 BTS에 대한 솔로활동의 성과에 대해서 보도하였습니다. 지난 7일 방송된 뉴스메이커는 상당한 시간을 투자하여 슈가의 솔로활동 행보를 소개했습니다.
기자는 BTS의 슈가가 미국 프로농구 리그인 NBA 앰버서더로 위촉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슈가는 "어린 시절부터 농구를 정말 좋아했다. 영광으로 생각한다. 앞으로도 NBA와 함께 새로운 것을 많이 보여드리겠다."라며 앰배서더로서 포부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슈가는 앞으로 NBA 경기 및 이벤트에 참석하고, 홍보 활동에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기자는 슈가가 활동명 '어거스트 디'로 데뷔 후 첫 공식 솔로 앨범 '디데이'를 발매하며, 가수 아이유와의 협업 곡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뉴스 17에서는 임미나 특파원이 BTS의 또 다른 맴버인 지민의 솔로곡 '라이크 크레이지'가 미국 빌보드 차트 정상에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민이 빌보드의 역사를 쓰고 있다는 여러 외신의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솔로 가수 중에는 싸이가 2012년 '강남스타일'로 빌보드 차트에서 7주 연속 2위를 기록한 바 있지만 지민이 한국 솔로 가수로는 최초로 빌보드 차트 정상에 올랐다면서 "지민이 빌보드 역사를 쓰고 있다"는 미국 CNN 방송의 논평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임 특파원은 미국 경제매체 포브스는 지민의 솔로곡이 이번 주 미국 음악계를 장악했다고 전했다고 하며 영국 방송 BBC는 지민의 이번 성과가 방탄소년단의 세계적인 팬덤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습니다.
BTS 멤버들의 군대 입대와 그룹 활동 전망에 대해 군백기를 잘 넘길 수 있을지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기존 아이돌 그룹의 경우, 빅뱅처럼 모든 멤버들이 비슷한 시기에 입대해 공통의 공백기를 갖거나, 슈퍼주니어처럼 한 명씩 차례로 입대하고 남은 멤버들이 유닛 활동을 해서 공백기를 넘어가거나 했습니다. 군백기가 크게 체감되려면 아이돌 그룹 완전체의 브랜드적 성격이 강해야 하는데, BTS는 멤버들의 솔로적인 역량이 강해서 다른 멤버가 군대에 가도 또 다른 멤버가 기존 수요를 충족시킬만한 활동과 관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틀즈가 그룹 해체 이후에도 개별 멤버들 역시 팝음악계에 많은 영향을 준 것처럼, BTS 멤버들도 그룹에서 개인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번 군백기는 멤버들이 자신의 진정한 역량을 찾아낼 수 있는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멤버들의 개별 활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BTS 제이홉이 진에 이어 육군 현역으로 군입대한다고 합니다. 긴 시간 동안 병역면제 이야기가 있었으나 정부의 미온적 대응 속 논의를 진척하지 못한 체 군백기에 돌입한 BTS는 여러모로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인종, 성별 등의 다양성을 반영하려는 전략으로 원작을 재해석하는 작품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도 존재하며, 어떤 작품은 원작의 취지나 메시지를 훼친다고 비난받기도 합니다. 지난 7일 출발600은 신작 영화들을 소개하며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곰돌이 푸를 공포영화로 비틀어 본 작품은 다정하던 곰돌이가 칼 든 살인마로 나온 것에서 대해 불편하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미국에서는 제작비 40배에 달하는 흥행을 거두었다고 전합니다. 또한,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재해석한 실사 뮤지컬 영화 '인어공주'에서는 흑인 배우 겸 가수 할리 베일리가 주연을 맡았고 이에 대해 인어 공주의 원작 취지와는 어울리지 않는 지나친 정치적 올바름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할리 베일리는 작품의 메시지에 주목해달라고 말하며, 새로운 작품에서

는 왕자가 아니라 자신을 찾으라는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작의 재해석과 비틀기는 계속될 전망이며, 평가는 관객들의 몫이 될 것이라는 논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원작 비틀기란, 기존에 존재하는 작품을 새로운 형태로 재해석하거나 변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에 존재하던 작품에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거나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기존에 있던 작품을 원작으로 삼아 새로운 버전을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원작 비틀기는 기존에 있던 작품의 새로운 재해석을 제공하며, 새로운 팬층을 만들어내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다양성 전략으로서 기존 작품에서 찾을 수 없는 재미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디즈니 캐릭터인 곰돌이 푸를 공포 영화로 변형한 작품은, 해당 동화의 저작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제작이 가능했습니다. 저작권 만료로 다양한 장르적 변화가 가능해졌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인종적 다양성 차원에서 흑인을 캐스팅한 헐리우드의 시도에 대해 정치적 올바름의 문제가 제기 되는 것은 어쩌면 미국 내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류가 글로벌 시대에 해외에 한국 문화의 다양성이란 측면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미국 중심의 다양성 담론은 주로 인종주의를 개선하고 있지만 다문화 중심 문화다양성 정의가 한류정책 및 문화예술정책에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대중문화가 가지는 획일화나 표준화 논쟁, 한류의 민족주의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문화다양성과 사회적 가치 추구를 위한 방법은 무엇일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관객의 불편함에 대한 우려보다 이러한 다양성 추구가 의미하는 정치, 경제, 사회의 의미를 되짚어 보며 논의를 확대해보았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임윤주 시청자평가원(23. 04. 23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595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최근 학교폭력을 주제로 한 드라마가 인기를 모았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공직 기용 과정에서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이 제기되어 후보자가 낙마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난 12일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도한, 13일 <뉴스 투나잇>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이 처벌에 초점을 맞춘 엄벌주의 기조가 확연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한편에서는 조치의 실효성 여부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학교폭력에는 반드시 불이익이 따른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을, 학생부 중심 대입 전형 뿐 아니라 정시 대입 전형에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세부 기준을 만드는 것은 각 대학의 몫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세부 지침 없이 자체 기준을 설정해야 하는 대학측은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감점 수준이 너무 낮다면 실효성 없는 대책이란 비판이, 반대로 너무 높다면 과도한 낙인찍기란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입시 자체에 관심이 없는 가해 학생에겐 학폭 기록 반영 여부가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이란 견해와 가해 학생의 불복 소송 등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과 관련하여, 연합뉴스TV는 다양한 보도를 통해 구체적인 정보들은 전했습니다. 종합 대책의 주요 내용을 전달한 보도, 현재 학교폭력 조치와

비교하여 개선되는 내용에 대한 보도, 교육계의 반응을 전달한 보도 등이 있었습니다. 정부 브리핑의 내용을 빠짐없이 전달하면서도, 주요한 주제별로 정리해 보도하여 연합뉴스TV 보도 내용만으로도 해당 이슈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가능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뉴스는 사실상 이번 대책의 빈틈을 지적한 보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 실효성이 부족한지, 예상가능한 부작용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보도하였습니다. 특히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 대담을 통해, 보다 더 구체적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는데요. 12일 <뉴스 프라임> 살펴보겠습니다.
대담은 최선희 푸른나무 재단 상담본부장과 최단비 변호사가 참석하여, 이번 정책에서 제기될 수 있는 의문점을 하나씩 해소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가해 학생 조치'라는 측면에서, 최선희 본부장은,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에게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학교폭력 정책의 최종 목표는 가해 학생의 선도와 교육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피해 학생 보호 방안'이라는 측면에서, 최단비 변호사는,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고자 제기하는 소송이 늘어나,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될 것을 대비하여, 피해자 진술권을 보장하기로 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입 반영'과 관련하여서는 기준의 모호함 외에도, 대학 입시와는 상대적으로 거리감이 있는 초등학생·중학생 등 저연령층의 학폭 방지 부분의 미흡함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외, 소년범과의 형평성 문제, 이중 처벌의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대담은, 이번 대책의 주요 개선안을 먼저 구체적으로 정리한 후, 관련 의문점과 우려 사항을 하나씩 정리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덕분에 이번 대책을 둘러싸고 제기된 대부분의 쟁점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보도되었습니다.
특히 실질적인 사례 등이 등장하여 이해가 더 쉬웠는데요. 최선희 푸른나무 재단 상담본부장은, 그간 가해자의 전학이 피해 학생에게 오히려 책임 회피처럼 느껴져 더 힘들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최선희 변호사 역시 대학 입시 반영 관련, 최근 논란이 되었던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 사례를 들어, 학폭 관련 반영 비율이 낮을 경우, 실효성 역시 낮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대담 말미에는, 교권이나 학교 신뢰 회복과 관련된 이야기도 언급되었는데요. 최근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과 관련해 보도한 16일 <일요와이드> 살펴보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전국적으로 학생 인권 강화 여론에 불을 붙였던 '오장풍 교사' 사건을 계기로, 서울·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10여 년이 흘렀는데요, 기자는, 오히려 학생과 학부모의 폭언, 폭력 등에 시달리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역시 최근 학교폭력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지나친 학생인권 강화"에 따른 문제점을 거론했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서울지역 학생인권조례는, 서울시의회가 4만4천여 명의 서명이 담긴 주민조례 청구를 접수하고, 지난달 13일 폐지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폐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소수 학생들의 일탈을 막겠다며, 학생인권의 보호막을 걷어내는 것은 '탁상행정'이자 '시대착오'라는 반대 의견도 존재합니다.
보도는, 마지막으로, 교육계 안팎에선 학생인권과 교권이 상충하는 가치가 아닌데다, 권리 측

면만 부각되어온 학생인권의 부작용도 분명한 만큼, 무엇보다 절충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본 보도는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과 맞물려, 학생인권조례의 현황을 전해, 학교 교육에 대해 더 폭넓게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보도에서 전한대로 서울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논의 중이고,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또 다른 지역에서는 학생 인권 뿐 아니라 교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인권조례가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충하는 가치가 아니라고 기자 역시 마지막에 언급하였으나, 사실상 전반적인 보도 내용이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충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어, 중요한 보도임에도 불구하고 표현상에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향후 기회가 된다면, 폐지 수순까지 가게 된 쟁점은 무엇인지, 특히 문제가 되었던 조례안 등은 무엇이었는지 등에 대해 전달해주신다면, 해당 이슈를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10대 학생들의 안타까운 사건이 연이어 있었는데요. 먼저 17일 <뉴스 투나잇> 보도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빌딩에서 10대 학생이 떨어져 숨졌습니다. A양은 며칠 전부터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해당 과정을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생중계했습니다.
당시 A양의 라이브 방송을 20여 명이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방송을 보다 사태의 심각함을 느낀 시청자들이 신고를 했고, 투신 약 10분 전 경찰과 소방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A양의 극단적 선택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자살 사건을 보도할 경우, 다른 보도보다 더 신중을 기해야 할 텐데요. 10대의 자살 사건은 시청자들에게 더 많은 안타까움과 충격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특히 또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 보도의 경우 'SNS 생중계'라는 자극적인 요소가 헤드라인에서 강조되었고, 보도 내용에서도 '라이브', '실시간', '시청자' 등 관련 내용이 지속 언급되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한, 본 사건과 실제로 관련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은 '또 다른 투신 소동'이 함께 언급되고, '자살 명소'와 같은 단어가 보도된 점 역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살 보도 권고 기준에서도 이와 같은 자극적인 표현을 삼갈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 안지연 시청자평가원(23. 04. 30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596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최근 마약과 관련된 범죄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된 것이 마약 범죄 급증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는 지난 23일 〈뉴스 15〉 에서 마약 범죄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마약을 넣어둔 가방을 찾으러 경찰서 지구대를 찾은 60대 A씨가 불구속 입건되었다는 내용인데요,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월, A씨가 분실한 가방 내부에서 담배 모양의 마약 의심 물체를 발견하였고 이를 검사한 결과 마약임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분실 가방을 찾기 위해 방문한 A씨는 경찰의 추궁 끝에 혐의를 인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2일 〈뉴스

17〉 에서 청소년들의 마약 범죄에 대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달 중학교 3학년 학생 세 명이 필로폰을 집단 투약했다는 소식과 함께 판매와 유통에도 청소년들이 가담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마약 범죄가 더 문제가 되는 이유는 경찰에 적발된 청소년 마약사범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고등학생들이 오피스텔을 차려두고 마약류를 팔다가 경찰에 붙잡히는 등 10대 마약상이 등장할 만큼 청소년들의 마약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보도에서는 청소년들의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관련 교육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마약알코올학과 교수의 자문을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SNS상의 마약 광고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호기심이 중독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언급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마약과 관련된 보도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 마약 범죄가 만연해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된 보도는 주로 마약을 어떻게 구하고 팔았는지를 다루는 경향을 보입니다. 사실에 근거한 보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약을 사고 파는 내용이 뉴스를 통해 빈번하게 등장하다 보면 모방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 범죄 관련 보도를 할 때에는 마약 사범이 받게 될 처벌 등을 함께 언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뉴스 17〉 에서 다룬 청소년 마약 범죄 보도 말미에 교육정책의 부재 및 SNS 광고의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덧붙인 것처럼 마약 범죄 증가와 관련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마약이 우리 사회에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해 보자는 취지의 내용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난 23일 〈일요와이드〉 에서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보도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이 되었을 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이용하여 불법촬영물 삭제 및 적절한 대응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른바 디성센터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운영하는 곳으로 불법촬영물 피해자에 대한 상담부터 수사기관 연결, 해당 불법촬영물의 삭제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곳에서 삭제한 불법촬영물도 2018년 출범 이후 6배 이상 급증했고 365일, 24시간 전화와 온라인으로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불법촬영물을 지우기 위해 막연히 사설업체를 찾는 경우보다 좀 더 폭넓은 대응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상담자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 권익침해방지과장은 방통위 및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불법사이트 차단과 수사 등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디지털성범죄 피해에 취약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 콘텐츠를 보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만큼 피해자도 많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특히, 스마트기기와 소셜미디어는 불법촬영물이 유포되는 것을 가속시켰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성범죄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확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에 노출된 피해자들은 개인의 노력으로 피해촬영물을 삭제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어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보도는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환경에서 범죄에 노출되었을 때 대처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주어 도움이 되었습니다. 추후 디지털 성범죄 관련 보도를 할 때 이와 같은 피해 구제

방안을 언급해준다면 관련 범죄 발생률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이 된 피해자들 외에 일반인들도 잊힐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와 관련된 시범 사업을 운영한다는 소식인데요, 24일 〈뉴스워치〉의 보도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만 24세 이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전했습니다. 개인정보포털 홈페이지에서 삭제를 희망하는 아동, 청소년 시절 게시물 주소 등 자료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자신이 작성한 글 외에 타인이 올린 불법 촬영물과 개인정보 불법거래와 관련된 게시물도 삭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통 자신이 온라인에 올린 게시물을 쉽게 삭제할 수 있지만 사용이력이 오래된 사이트의 경우 계정 정보를 분실하거나 탈퇴했을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삭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삭제를 하지 않는 이상 누적되기 때문에 유출의 우려도 존재합니다.

이 보도는 삭제를 희망하는 게시물의 삭제 신청 방법을 소개하는 한편, 시범 사업이 운영된다는 단순 보도에 그쳐 아쉬움이 남습니다. 후속보도를 통해 이 시범 사업이 갖는 의미와 전망, 효과 등을 전달한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거 통일을 염원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현재 2030세대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4일 〈뉴스투나잇〉은 이와 관련된 소식을 다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대와 30대 과반은 통일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를 전했습니다. 이는 바른언론시민행동이 20세~39세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응답자의 61%는 '통일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으며, '꼭 필요하다'는 응답은 24%,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은 14%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주요 외교 상대국 호감도 조사 결과에서는 북한보다 중국에 대한 반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보도는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2030세대가 북한과 중국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조사 결과만을 전달하는데 그쳐 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의 부재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해당 설문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관계자 인터뷰를 통한 분석이 덧붙여졌다면 2030세대가 주변국을 바라보는 관점과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표 방송스틸컷

<table>
<tr><td>일시/장면설명
2023년 4월 2일 04시/
임윤주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
 </td><td>일시/장면설명
2023년 4월 9일 04시/
김홍태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
 </td></tr>
<tr><td>일시/장면설명
2023년 4월 16일 04시/
이동준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
 </td><td>일시/장면설명
2023년 4월 23일 04시/
임윤주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
 </td></tr>
<tr><td>일시/장면설명
2023년 4월 30일 04시/
안지연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
 </td><td></td></tr>
</table>